

정치권, '연금개혁' 한 목소리... 조기대선 대비 표심 확보

여야정 '골든타임' 공감대
양당 지도부 의제 선점 나서
이달 중 개혁안 처리 가능성



한 시민이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 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의 공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공방이 한창이다.

지난 3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접쳐지는 만큼, '연금개혁'이란 주요 의제를 선점해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부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개혁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여·야 모두 이달 내에 연금개혁을 심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모수개혁은) 2월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월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회

에 발의된 22개 국민연금 개정안은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한 견해가 같다"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2월 내 연금개혁 성사를 목표로 일부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 의제의 선점에 나섰다. 연금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만큼, 표심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한 것이 여당 책임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연금개혁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 연금개혁이 성사될 것 같으니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던 것을 인정하라"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최근 야당이 연금개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정부 때 하지 않았냐"며 "최근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연금개혁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여·야 간 일부 합의된 모수개혁은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오는 9~10일 사이에 개최하는 '국정협의회 4차 회담'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나간다.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 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oul.co.kr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수요-공급' 곡선 요동... 산업계 부담 가중

美·中 추가 관세 등 불확실성 가중
정유업계, 고부가 제품 수출 주력

'트럼프 관세장벽'으로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 정유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업황 악화 속에서 정유업계는 트럼프 관세 유예 조치에 따라 수요 공급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정제마진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중국의 보복 대응 발표 이후 1.9% 하락해 배럴당 72달러로 떨어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5달러에 근접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 악화와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하락했으나, 이란에 대한 제재로 원유 수출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유업계는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

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지속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높은 가격에 원유를 구매할 후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해 추가적인 적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 반대로 유가 상승 시 단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제품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변동성이 클수록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더욱이 정제마진 약세까지 겹쳐 정유업계는 이중고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평균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2.1달러로 지난해 4분기 평균 5달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뺀 수치다. 통상 5달러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정유업계는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해 수출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수출한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억 1189만배럴, 2억 166만배럴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항공유 수출량도 전년 대비 3% 늘어난 8826만 배럴로 조사됐다. 휘발유와 경유의 선전에 힘입어 전체 석유제품 수출도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4억 9045만 배럴로 집계돼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 9억 3465만배럴 중 52.5%를 정제해 수출한 셈으로 수출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업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인교 "기업 '헬프데스크' 즉시 가동"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조치 확산 주목... 총력 대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주요국 대응현황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조치 시행을 유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조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와 관련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와 캐나다·멕시코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과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책임론' 강조... 중징계 가능성

(우리금융회장)

금융업계 불법대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 이목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은행의 경우 2334억원(101건)의 부당대출이 확

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은 기준에 알려진 350억원 이외에 추가로 380억원이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451억원(61.8%)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지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고 명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손 전 회장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5개월 간 미보고함으로써 금융권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부당대출 원인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 중 외형 확대에 치우쳐 과도한 경영목표를 제시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건전성 리스크 관리, 이사회 절차 등을 경시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고위임직원의 부당대출 취급분 1604억원 가운데 987억원(61.5%)이 임 회장 체제에서 발생했고 이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부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

한 책임 물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종룡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종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제재는 문책경고 이기 때문에 임종룡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금융원이 CEO 제재를 직접 강조하기 위해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